

연구논문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Koreans' Welfare Consciousness:
Focusing on State's Responsibilities upon Public Agenda

김신영*
Shinyoung Kim

이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과거 연구들이 의존해 왔던 경제적 변수들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여 최근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신뢰가 개인의 복지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복지의식은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통해 측정되었다. 마르크스주의적 계급결정론과 제도주의에 입각한 복지지위의 신정치 논리는, 물질적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인식과 정치적 행위의 결정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적 의식의 작동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사회적 신뢰감은 공적제도에 대한 신뢰를 증가시키고 이는 국가의 복지제도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가설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다른 모든 변수군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회적 신뢰는 응답자의 복지의식에 정(positive)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사회신뢰, 국가의 공적책임, 복지의식

This study purports to empirically examine the potential effect of the level of social trust on their welfare consciousness level. Although previous studies in the field have focused on socio-economic or class-oriented variables, the accumulated results have shown that the effects were inconsistent at best in Korean context.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of theoretical assumptions from mainstream Marxists and institutionalists, this study suggests the relative autonomy of social consciousness and its independent effect on welfare consciousness. The analysis shows that both foundational variables, income levels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the level of social trust have significant impacts upon the respondents' level of welfare consciousness.

* 한양사이버대학교 실버산업학과 조교수 김신영.

E-mail: kimsy@hycu.ac.kr

Key words : social trust, welfare consciousness, multiple regression

I. 서론

이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김대중 정부의 등장과 함께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 중 하나로 등장한 사회복지에 대한 학문적 성과는 매우 방대하다. 여기에는 한국사회의 복지제도 발전과정에 대한 기술적 정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비교사회론적 관점에 입각한 국가 간 복지제도의 비교, 다양한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심리학적 변수의 적용을 통한 복지제도의 효과측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복지와 관련된 다른 연구주제들에 비해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국의 정치·경제적 조건이나 사회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복지의식은 복지정책 수립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기본요인이 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의식은 해당 사회의 공적 복지제도나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복지제도의 발전방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국가복지제도의 정당성은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제도에 대한 우호적인 지지 정도 및 그러한 지지가 현실 정치 속에서 정치적 행위나 의사결정의 원천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¹⁾. 그러므로 공적 복지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복지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복지 친화적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은 크게 복지의식 자체의 개념적 구성도를 파악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들, 복지의식과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및 집단별 비교를 수행했던 연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1) 최근 십 수년 간 우리나라는 복지제도의 변화 및 발전을 둘러싸고 심각한 사회갈등 양상을 보여왔다. 건강보험의 통합, 국민연금의 확대 및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집단들(stakeholders) 간의 갈등과 충돌은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시민사회의 폭발적 성장을 경험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심화된 계층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로 인하여 복지제도의 변화를 둘러싼 사회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사회적 연대나 합리성에 기반한 건강한 토론이 아닌 극단적 개인이익 추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세 번째 연구유형, 즉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과거 연구들이 의존해 왔던 경제적 조건 관련 변수들에서 어느 정도 탈피하여 최근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신뢰가 개인의 복지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의식에 대한 과거 연구들을 국내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과거 연구들에서 보여 왔던 경제관련 변수 위주의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사회적 신뢰와 복지의식 간의 관계를 가설로 제기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다음 단계는 실증적 분석 단계로서 2006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자료를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가설검증을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고 이 연구의 사회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글을 마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국내²⁾ 복지의식 관련 연구는 첫째, 복지의식의 개념적 구성도를 그려보고자 하는 연구, 둘째 복지의식의 사회집단별 실태에 대한 기술적 연구, 마지막으로 복지의식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적 연구들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연구주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념형적 차원에서 복지의식은 개인의 자유와 결과에 대한 평등을 부정하는 반집합주의, 규제되지 않은 자유시장에 대한 불신과 정부개입의 당위에 대한 소극적 인정으로 요약되는 소극적 집합주의, 국가의 복지개입에 대한 분명한 지지를 보이는 페이비안 사회주의(점진적 사회주의자), 그리고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공존가능성을 애초에 부정하는 마르크스주의로 구분될 수 있다. 실제적인 차원에서의 복지의식은 국가에 의한 복지정책의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태도에서 보다 구체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복지의식이란 특정사회의 사회복지체제, 더 나아가 사회구성원의 복지를 추구하는 국가정책 일반 또는 궁극적 복지책임주체³⁾에 대한 가치지향이나 태도 또는 국가 주도의

2) 복지의식의 국가 간 비교연구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각 국가들의 계급 정치적 맥락과 복지제도의 유산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다(Esping-Anderson 1985; Taylor-Gooby 1985; 유범상·이현숙 2008; 백정미·주은선·김은지 2008)

3) 김연명(2002:183)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 복지를 제공하는 주체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국가부문은 합법적인 강제력을 통해 행위를 조정하거나 자원을 할당한다. 시장부문은 경쟁이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또는 감소에 대한 태도로 대략 정의될 수 있다.

사회과학적 개념으로서 복지의식이 가지는 특징은 첫째,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집단적 의식이며, 둘째,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셋째, 사회구성 및 운영원리에 대한 전반적 가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념적 성향, 사회 내 불평등에 대한 태도,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실천의지, 복지비용과 조세문제, 소득재분배 등 개념적으로 상이한 하위구성영역들을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실제 경험적 연구에서의 복지의식은 어떤 하위개념들에 주목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예컨대 사회구성 원리를 강조하는 경우 복지의식은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주의를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에서 구분가능하며, 복지책임 주체를 강조하는 경우 복지의식은 개인책임과 국가책임을 양극단으로 하는 스펙트럼에서 분류가 가능하다. 최균·류진석(2000)에 따르면 복지책임 주체와 복지실천의지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개인의 복지의식은 국가주도 연대형, 국가의존 소극책임형, 민간주도 연대형, 민간의존 소극책임형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가능하며 한국의 경우는 국가의존 소극책임형에 해당된다.

복지의식의 개념적 다차원성에 주목하여 복수의 측정도구를 통해 복지의식을 측정한 연구들로는⁴⁾ 사회적 형평성, 복지책임 주체,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정부역할, 사회보장(social insurance)형식의 제도운영, 조세부담, 영역별 복지재정 등 여섯 가지 영역을 구분하여 측정한 우아영(2000)의 연구가 있다. 또한, 최균·류진석(2000)은 복지의식을 가치적 차원과 태도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전자를 다시 복지친화적 가치와 반복지적 가치로, 후자를 낮은 복지실천의지와 높은 복지실천의지로 구분하였다. 조돈문(2001)은 복지제공의 필요성, 복지책임의 주체, 복지재정 확대, 조세부담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복지의식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성균(2002)의 연구는 복지책임 주체에 대한 설문항목을 복지수혜자 집단별로 구분하여 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보다 최근의 연구로는 류진석(2004)이 국가에 의한 복지기능의 정당성, 국가의 복지공급의 책임성, 복지비용 부담의 수용성, 복지제도의 선호성, 그리고 복지재정 확충에 대한 정당성 등 다섯 가지 영역의 복지의식을 구분 및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은선·백정미(2008)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던 복지인식 측정도구에 평등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들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복지의식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라는 원리를 통하여 조정과 할당을 이루어 나가며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부문은 자발적 협동과 부조를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

4) 국내 복지의식 연구에 사용된 단일문항 척도는 복지수급 대상집단에 대한 국가책임 지지도(이인재 1998; 이성균 2002)가 있다.

과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를 통해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으로 구체화되고 실천 의지와 상호결합을 통해 형성되고 학습된 사회적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복지의식의 두 번째 연구유형은 복지의식의 집단별 실태 연구이다. 복지의식의 집단별 실태에 대한 국내연구는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전 국민, 대학생, 정책결정 집단, 종교인 등 다양한 사회구성 집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집단별, 직업별 복지의식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김영모(1986)는 빈곤, 보건, 노인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 영역들에 대한 응답자의 의식을 직업별로 분류한 후 국가제도적 복지기능을 강조하는 인식은 관리 및 사무직 계층과 고용주 그룹에서, 시장기능에 의존하며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인식은 자영업민에게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이후 1991년에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국가의 복지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무직노동자 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김영모 1991).

복지의식의 사회계층별 차이에 대한 다른 연구들로는 안치민(1995)과 김희자(1999)의 연구가 있다. 중간계층의 분화와 이에 따른 복지의식의 변화에 주목한 안치민의 연구에 따르면 후기산업사회 진입과 더불어 급속도로 팽창한 신중간계층은 대기업 사무직으로 주로 이루어진 구중간계층에 비하여 복지의 사회적 책임을 더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희자(1999)는 공적복지제도의 두 가지 유형인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모두에서 복지의식의 계급·계층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복지국가의 시기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그러나, 복지의식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는 일정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외부변수에 대한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두 변수 간의 단순상관관계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계급이나 계층에 따른 복지의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었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연구주제는 두 번째 연구주제를 좀 더 심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전자가 복지의식의 집단별 차이, 예컨대 성, 연령집단, 직업 등을 밝혀내는 데 집중했다면, 후자의 경우는 마르크스주의류의⁵⁾ 계급결정론에 입각하여 의식의 사회경제적 토대에 대한 보다 정교한 접근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거대담론보다는 탈계급주의적이며 동시에 신제도주의적인 접근을 가미한 연구들이었다(조돈문 2001; 이성균 2002; 안상훈 2000).

5) 사실 마르크스는 영국의 공장법(factory act)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곤 복지제도에 대해 직접적인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복지사회 자체에 대한 마르크스의 이론 또한 명시적이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르크스는 영국의 공장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마르크스주의류의 계급결정론에 기반한 연구들(김영란 1995; 안치민 1995; 이성균 2002; 조돈문 2001)에 따르면, 서구의 경우(Pamplé & Williamson 1989; Therbon 1987; Mishira 1984; Esping-Anderson 1990; Hansenfield & Rafferty 1989; Svalfors 2004)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개인의 계급적 지위가 복지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이들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계층지위가 높을수록 친복지적 경향을 보이거나 구중간계급이 노동계급보다 국가의 복지개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계층의 복지의식에 대한 효과의 유의성은 조돈문(2001)의 연구에서 관찰되고 있으나 이 역시 복지수혜집단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적 유의성에 그치고 있다. 한국에서 복지의식에 대한 계급설명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주은선·백정미(2008)는 특수고용형태의 발달로 인한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 간의 불투명한 경계,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노동자계층의 빈민화로 인한 노동계급의 계층적 동질성의 약화를 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 역시 사후적(post-hoc) 설명에 그치고 있다.

복지의식의 차이를 설명하는 제도적 위치로서의 복지지위에 관한 안상훈(2000)의 연구는 주류 마르크스주의적 전제로부터 일정 탈피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은 기존의 계급구분의 경계에 종속되지 않는 경향을 띠는 새로운 이해집단들을 창출하였으며(대표적으로 연금수급노인, 장애인, 여성, 공공부문 종사자등) 이와 같은 사회집단들은 경제적 계급과는 일정 무관하게 공통의 이해관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계급의 수적 감소 및 노동계급의 의식의 변화는 복지의식 연구에서 계급균열의 현실적 설명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따라서 계급위치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의 특성이나 개인의 자원규모, 그리고 위협의 정도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균열, 예를 들면, 복지혜택과 복지부담 간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과거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세 번째 연구주제와 궤를 같이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국내의 복지의식 결정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 가운데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복지의식에 가지는 효과의 미약함에 주목하고자 한다. 비록 최근의 한 연구에서는 그것의 이유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으나 사후적인 해석에 그치고 있다. 이 연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마르크스주의류의 계급결정론과 제도주의에 입각한 복지지위의 신정치 논리는 물질적 이해관계에 의한 사회적 인식과 정치적 행위의 결정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말하자면 개인의 경제적 위치에 기초한 이해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회적 의식

의 작동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 많은 노동자들이 도식적인 예측과는 달리 보수성향의 정당에 투표를 하는 반면 중산층이나 부유층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평등이나 유대의 기치 아래 부의 재분배를 표방하는 복지국가에 공감하고 있다면, 노동자들과 많은 중산층들의 그러한 행위를 허위의식라고 단정하기 이전에 이러한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실재적 원인에 대하여 다른 각도에서의 조명이 필요한 것이다.

III. 사회신뢰와 복지의식

이 연구는 사회적 의식이 개인의 복지의식에 미치는 효과에 주목하고자 한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회적 의식을 정의하자면 복지에 대한 의식이 포함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사회적 의식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사회적 신뢰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적 신뢰에 대한 논의는 철학, 사회학, 경제학 등의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사회복지 연구에까지도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ukuyama 1995, 1997; Putnam 1993; Zucker 1986; 박찬웅 2006).

사회적 자본의 한 유형으로서 신뢰는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현대사회의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성을 어떻게 조정하고 관리하여 보다 조화롭고 호혜적인 새로운 공동체적 질서와 의식을 생성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주어진 여건에서 사회적 신뢰의 수준은 구성원들의 공적의무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다시 말하자면, 구성원들의 사회적 신뢰의 정도가 높으면 공적의무감을 상호 공유하게 되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추가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구성원들 간의 장기적인 통합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신뢰의 다양한 유형⁶⁾ 가운데 이 연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도의존적 신뢰이다. 제도의존적 신뢰란 한마디로 공식적인 제도에 의해서 생산되는 유형의 신뢰이다. 전(全)사회적 신뢰의 증가를 위해서 제도의존적 신뢰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사적인 접촉의 확대에 의한 일반적인 신뢰의 구축은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반면 제도의존적 신뢰는 공식적인 제도에

6) 주커(Zucker 1986)에 따르면 신뢰는 그것의 생산양식 또는 근거에 의해 과정의존적 신뢰, 특성의존적 신뢰, 제도의존적 신뢰로 구분가능하다. 구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박찬웅(2006)을 참조하기 바란다.

의해 신뢰를 구축하기 때문에 그것의 효과 또한 훨씬 광범위하며 안정적이다. 제도의존적 신뢰를 위한 전제들은 제도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과 대다수 시민들의 그에 대한 신뢰 등이 있다(박찬웅 2006).

그렇다면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그들의 사회적 신뢰의 정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념적 정의까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에 대한 일반론적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정의는 사회복지의 유형을 살핌으로써 파악 가능하다. Wilensky & Lebeaux (1965)에 따르면 사회복지의 잔여적 사회복지(residual social welfare)와 제도적 사회복지(institutional social welfare)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가 시장이나 가족과 같은 정상적인 복지공급 주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의 정책적 개입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현대 산업사회의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입을 의미한다. 따라서 잔여적 사회복지의 보충적, 일시적, 대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복지의 수혜자는 사회적 낙인(stigma)이라는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된다. 대표적 정책은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제도적 사회복지의 산업사회에서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감소 위험요인(대표적으로 실업, 질병, 재해 등)을 대비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갖는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공적연금이나 의료보험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잔여적인 성격의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그리고 제도적인 성격을 갖는 사회보험으로 구성된다. 정책의 성격이나 대상 그리고 사상적 기반 등의 차원에서 볼 때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개념적 및 실제적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적복지의 증대는 장기·거시적으로는 경제의 자동안정화에 기여하고 인간자본의 보존 및 발전을 통한 사회총생산량의 증가를 가져오며 고용을 창출하고 공적저축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전통적 동기이론에서 상정하는 경제적 인간상 그리고 근시안적인 인간상을 전제하였을 때, 공적복지의 증대는 개인의 단기적 이해와 반드시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가능성에 있다. 즉, 사회구성원 개인은 공적복지가 주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들을 자신의 이익과 반드시 일치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근시안적인 개인은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의 확대와 근로동기의 약화(부유층과 사회복지 수혜자 모두의)를 우려하고, 따라서 사회복지의 증가를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혐오하는 태도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의 사회복지 증대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세금부담 확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수혜범위의 확대와 제도의 안정화를 통해 개인이 미래의 복지수혜자가 될 가

능성을 동시에 증가시킨다. 여기에서 개인은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 그리고 개인적 이익과 전 사회적 이익이 충돌하는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⁷⁾. 이러한 사회적 딜레마 상황은 연구의 수준(미시 vs 거시)과 영역(disciplines)에 따라 공공재(Olson 1965), 무임승차(Olson 1965; Sweeney 1973), 죄수의 딜레마(Rapport & Chammah 1965), 공유지의 비극(Hardin 1968) 등의 주제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이들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내리고 있는 결론은 사회적 딜레마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자기 자신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는 근시안적 사고의 폐기와, 둘째,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공존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지향이 필수적이며 후자를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서로에 대한 신뢰가 필수적인 것이다. 만약 공적복지제도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일종의 사회적 딜레마 상황으로 규정한다면 공적복지에 우호적인 태도를 위해서 사회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필요할 것이라는 가설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신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개념정의를 제공해 왔다(Zucker 1986; Mayer et al. 1995; 김지경 2006). 많은 문헌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신뢰가 요구되는 상황은 반드시 상호의존적이며 일정 정도의 위험(손해 또는 배신)이 예상된다 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일정 정도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신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딜레마 상황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감시의 불완전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의 감소는 사회감시비용의 증대, 사회구성원 간 결속력 와해, 불확실성의 확대를 야기하며 중국에는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이어

7) 근시안적 개인이 복지제도와 관련되어 처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은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system)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 따라 부과방식(Pay-As-You-Go: PAYG)과 완전적립방식(Fully-Funded)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현 노동세대가 납부하는 연금급여로 현 은퇴자들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반하여, 후자는 미래 은퇴자들에게 지급될 연금총액을 후세대에 의존하지 않고 미래 은퇴자들이 노동기간에 낸 보험료를 미리 축적해 놓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적립방식(partial funding)을 택하고 있는 한국의 현재 제도는 2~3년 정도 연금지급액을 적립해 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적립금이 있기는 하나, 이는 기금의 신축적 운용을 위한 예비비와 같은 역할일 뿐, 실제 기금의 대부분은 현 노동세대의 기여로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부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운영원리는 현 노동세대가 현 은퇴세대의 연금급여를 부담하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보험료는 다소 먼 미래에 자신에게 연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 또한 미래의 노동세대가 자신들의 연금을 보험료로 지불해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하다. 자신이 부담하는 세금이나 보험료가 실제로 단기간에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공적부조제도나 일반적 사회보험제도들 모두 공히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저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감소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사회적 신뢰는 협동행동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딜레마 상황의 극복을 돕게 된다. 개인의 중·장기적 이익과 사회전체의 이익 그리고 이것과 대립하는 개인의 단기적 이익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나는 갈등상황은 첫째, 현재의 개인이 보는 손해가 미래 본인의 이익, 더 나아가 전 사회적 이익으로 반드시 보답될 것에 대한 믿음, 둘째, 사회복지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것들이 바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신뢰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에 기반하여 도출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구성원들의 사회적 신뢰감은 그들의 공적복지확대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자료 및 분석결과

1. 자료 및 기술 통계

이 연구에 사용될 자료는 2006년에 수행된 한국종합사회조사⁸⁾(KGSS) 자료이다. KGSS는 1) 반복핵심모듈(replicating core questions), 2) 국제사회조사기구(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의 40여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연차적 주제모듈, 3)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격년주기로 공동조사하는 주제모듈, 그리고 4) 특별연구를 위한 주제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2006년에 수행된 KGSS는 ‘정부의 역할’을 특별주제 모듈로 다루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큰 정부 vs 작은 정부에 대한 선호’, ‘정부의 책임 범위’, ‘조세형평’,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 ‘정부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응답자의 의식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본은 전국의 가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계지역집락표집방법(multi-stage area cluster sampling method)에 의해 추출되었으며 현지 조사는 조사원이 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8) KGSS는 한국 사회과학연구를 위한 기초통계 원자료의 생산 및 확산을 위해 시행되는 연차적 대단위 전국표본조사사업으로서 미국 시카고 대학교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의 GSS(General Social Survey)를 기본 모형으로 설계되었다.

〈표 1〉 조사응답자의 특성

(단위: 명)

변 수	전 체	사 례 수	%
성 별	남 성	714	44.5
	여 성	891	55.5
	합 계	1605	100.0
연 령*	10대	47	2.9
	20대	281	17.5
	30대	389	24.2
	40대	419	26.1
	50대	196	12.2
	60대	145	9.0
	70대	103	6.4
	80대 이상	25	1.6
	합 계	1605	100.0
혼인상태	기혼(동거)	1049	65.4
	기혼(비동거)	172	10.7
	미 혼	384	38.4
	합 계	1605	100.0
종 교	불 교	454	28.2
	기독교	344	21.4
	천주교	159	9.9
	기타 종교	12	0.7
	무종교	636	39.6
	합 계	1605	100.0
교육수준	무 학	70	4.4
	초등학교	130	.1
	중학교	126	7.9
	고등학교	488	30.5
	전문대학	180	11.3
	대학교	536	33.5
	대학원 이상	70	4.4
	합 계	1600	100.0
노동시장 참여여부	참 여	934	58.2
	비참여	671	41.8
	합 계	1605	100.0
노동형태(노동시장참여자 중)	임금노동	603	64.6
	자영업	331	35.4
	합 계	934	100.0
월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196	12.6
	100~300만원	599	38.5
	310~500만원	453	29.1
	501~700만원	199	12.8
	701만원 이상	109	7.0
	합 계	1556	100.0

* 원변수를 급간으로 재구성한 것이며 분석에는 원변수가 사용되었다.

2. 변수 및 분석모형

이 연구의 주요 변수는 사회적 신뢰감과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통해 측정된 개인의 복지의식이다. 사회적 신뢰감은 사회에 대한 전반적 신뢰감을 묻는 문항에⁹⁾ 대한 5점 척도로 구성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복지의식은 일자리, 의료, 노인, 실업, 소득격차 완화, 주거 등에 대한 정부의 공적책임을 묻는 여섯 개의 문항을¹⁰⁾ 요인분석 후 합산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단일변수를 통해 측정되었다¹¹⁾.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복지의식의 개념적 구성을 연구한 과거 문헌들을 종합해 보면 복지의식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를 통해 책임주체에 대한 인식으로 구체화되고 실천의지와의 상호결합을 통해 형성되고 학습된 사회적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정의를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복지의식 측정도구는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주로 묻고 있으며 복지에 대한 실천의지 측면은 다루고 있지 않다. 조작적 정의 단계에서의 이러한 문제는 2차 자료를 사용하는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문헌검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는 복지의식의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적 영역이며 과거 문헌들 대부분 역시 ‘복지책임의 주체’를 복지의식의 핵심적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우아영 2000; 조돈문 2001; 이성균 2002; 류진석 2004).

분석에 투입될 다른 변수들은 과거 문헌검토를 통해 개인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교 등)과 계층관련 변수들(고용형태, 주관적 계층의식, 소득 등), 그리고 사회심리학적 변수들(건강만족, 생활만족도 등)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연속형 변수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9) 조사에 사용된 문항은 ‘귀하는 우리사회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이다.

10) ‘귀하는 다음의 각 사항에 정부가 얼마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은 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 ‘환자에게 보건의료 제공’, ‘노인에게 적절한 생활수준 제공’, ‘실업자에게 적절한 노동기회 제공’, ‘빈부 간 소득격차 완화’,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주거 제공’ 등의 개별 항목에 대하여 4점 척도가 사용되었다.

11) 주성분 분석결과 하나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값은 일자리(.643), 의료(.658), 노인(.669), 실업자(.735), 빈부격차(.615), 주거(.667)로 나타났으며 하나의 요인에 의해 전체 변량의 43.21%가 설명되었다. 최종변수는 각각의 응답에 요인부하값을 가중치로 적용하여 여섯 개의 새로운 변수를 생성한 후 이들을 산술합산하였다.

〈표 2〉 변수 기술통계

변 수	문항 수	범 위 ¹⁾	평균(표준편차)
종속변인			
복지인식	6	6~24	18.26(2.92)
독립변수			
성	1	0~1 ²⁾	n.a ³⁾
혼인상태	1	1~3 ⁴⁾	n.a
연 령	1	18~92	43.54(15.54)
교육수준	1	1~7 ⁵⁾	3.54(1.53)
주관적 계층의식	1	1~10 ⁶⁾	4.80(1.60)
정치적 진보/보수	1	1~5 ⁷⁾	3.30(1.38)
건강만족도	1	1~5 ⁸⁾	2.46(1.17)
생활만족도	1	1~5 ⁹⁾	2.82(.095)
종 교	1	1~5 ¹⁰⁾	n.a
월소득수준	1	0~21 ¹¹⁾	9.65(14.84)
노동시장참여여부	1	0~1 ¹²⁾	n.a
사회신뢰	1	0~10 ¹³⁾	5.28(1.92)

주: 1) 연속형으로 측정된 변인의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 기호가 부가되고, 범주형으로 측정된 변인의 경우엔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 기호가 부가됨

2) 0 = 여자; 1 = 남자

3) 명목변수인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는 구하지 않음

4) 1 = 기혼(동거), 2 = 기혼(비동거), 3 = 미혼

5) 1 = 무학, 2 = 초등학교(중퇴, 졸업), 3 = 중학교(중퇴, 졸업), 4 = 고등학교(중퇴, 졸업), 5 = 전문대학(중퇴, 졸업), 6 = 대학교(중퇴, 졸업), 7 = 대학원(중퇴, 졸업)

6) 1 = 최하층, 5 = 중간, 10 = 최상층

7) 1 = 매우 진보적, 2 = 다소 진보적, 3 = 중도, 4 = 다소 보수적, 5 = 매우 보수적

8) 1 = 아주 좋다, 2 = 다소 좋다, 3 = 보통이다, 4 = 다소 좋지 않다, 5 = 매우 불만족

9) 1 = 매우 만족, 2 = 다소 만족, 3 = 보통이다, 4 = 다소 불만족, 5 = 매우 불만족

10) 1 = 불교, 2 = 개신교, 3 = 천주교, 4 = 기타종교, 5 = 종교 없음

11) 월평균 가구소득을 50만원 단위로 구분한 것임(0 = 소득 없음, ... 10 = 450 - 499만원..., 21 = 1000만원 이상)

12) 0 = 노동시장 비참여, 1 = 노동시장 참여

13) 0 = 매우 믿을 수 없다.....10 = 매우 믿을 수 있다

〈표 3〉 복지인식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모형 1		모형2	
	Beta	t	Beta	t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남성)	-.017	-.460	-.010	-.274
연 령	.077	1.98*	.096	1.99*
거주지역1(대도시) ¹⁾	-.028	.521	.029	.509
거주지역2(중소도시)	-.006	-.118	-.005	-.092
혼인상태1(기혼_동거) ²⁾	-.130	-2.908**	-.150	-3.307***
혼인상태2(기혼_비동거)	-.067	-1.612	-.064	-1.543
종교1(불교) ^{3),4)}	-.017	-.412	-.013	-.357
종교2(기독교)	.021	.887	.033	.918
종교3(천주교)	.018	.591	.024	.684
교육수준	-.049	-1.119	-.057	-1.213
계층관련변수				
소득수준	-.104	-2.680**	-.097	-2.354**
주관적 계층의식	-.051	-1.404	-.021	-.563
노동시장참여	-.098	-2.447**	-.060	-2.198*
사회신뢰			.087	2.562**
사회심리학적 변수				
생활만족도	-.001	-.030	-.001	-.030
건강만족도	-.022	-.732	-.030	-.878
정치적 진보/보수	-.091	-2.765**	-.086	-2.566**
Adj - R ²	.110		.135	
F	12.331***		14.332***	
사례 수	1512		1504	

* = p<.05, ** = p<.01, *** = p<.001

1) 기준응답범주는 '읍면지역', 2) 기준응답범주는 '미혼', 3) 기준응답범주는 '종교 없음', 4) "기타 종교"는 사례수의 적음으로 분석에서 제외

3. 분석결과

복지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크게 네 개의 집단(사회인구학적 변수군, 계층관련 변수군, 사회적 신뢰, 사회심리학적 변수군)으로 구분하여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시 독립변수의 유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VIF 값을 통해 확인한 결과 통계적 유의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¹²⁾.

〈표 3〉의 분석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두 개의 모형 모두에서 연령과 혼인상태(기혼_동거)는 복지의식에 정(positive)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즉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 할 때,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미혼에 비해 동거를 하고 있는 기혼자일수록 국가의 공적복지책임에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다. 복지의식에 대한 연령과 혼인상태의 긍정적 효과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며 직관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결과이다. 다시 말하자면, 연령의 증가는 일정 시기가 지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약화를 가져오게 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공적복지의 실제적 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기혼_동거 집단이 미혼집단에 비해 친복지적 성향을 보이는 이유 또한 연령의 증가와 함께 혼인을 통한 가족(자녀 포함)의 구성 등은 공적복지에의 관심 및 욕구의 증가, 그리고 연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적복지의 실제적 혜택을 누리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소득수준과 노동시장 참여 여부 또한 두 가지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을수록 국가의 공적복지책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종속변수의 구성에 포함된 대부분의 국가공적복지책임이 저소득층이나 실업자를 포함한 사회취약계층임을 감안할 때, 경제적 조건이 국가의 공적복지책임에 대해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 이 연구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반면 주관적 사회계층의식은 두 모형 모두에서 복지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미치는 효과의 유의미성을 고려할 때, 주관적 계층의식의 이와 같은 결과는 중간계층으로의 응답 실효현상에 의해 독립변수의 변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셋째, 복지의식 연구에서 복지의식을 설명하는 변수로 주로 사용되어 온 변수인 '교육수준'은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은 국가의 공적복지책임에 대한 태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기보다

12) 가장 높은 VIF 값은 1.85(응답자의 교육수준)로 나타났다.

는 교육 수준의 변화가 가져오는 다양한 효과의 상쇄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즉, 교육수준의 향상은 소득의 증가와 함께 의식의 보수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보다 평등지향적이고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의식의 발전 또한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계층관련 변수, 사회심리학적 변수 등 다른 모든 변수군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회적 신뢰는 응답자의 복지의식에 정(positive)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사회적 신뢰감이 높을수록 국가의 공적복지책임에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이 연구는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 등이 사회발전에 미칠 수 있는 독립적인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경제적 조건이나 제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행위자의 모습은 제도결정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신제도주의자들의 반성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 역사제도주의자인 Immergut(1998)에 따르면 제도는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왜 행위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맥락을 제공할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제도적 장애에 직면하더라도 자기통찰적인(self-reflective) 행위자들은 창조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이는 행위자들이 상황에 대한 해석과 전략적 선택을 통해 동일한 제도적 제약조건하에서도 다양한 행위를 추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연구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감은 행위자들로 하여금 단기적 이해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간(間)세대적인 공적복지제도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근본적인 사고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서구 복지국가와는 전혀 다른 발전 경로를 겪은 한국은 복지국가로의 본격적 발전을 이제 막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지팽창을, 정치적 보수화로 인한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미국발 세계경제위기의 환경에서 복지축소를 동시에 모색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민주주의적 합의나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도적 유산이 매우 빈약한 상황에서 한국인의 복지의식이 서구의 고전적 이론들에 의해 의미 있게 설명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복지예산의 규모나 주요 복지정책들의 제도화 시기는 선진자본주의 사회

들, 심지어는 영·미형의 자유주의형 복지국가들과도 아직까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한 사회의 보편적 복지의식이 해당 사회의 복지정책 발전 정도에 일정 의존함을 감안할 때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서구사회의 그것과 수평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여전히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십수 년 간 한국사회에서 관찰된 사건들은 복지의식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들이 우리사회에서도 마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민주화와 1990년대 후반의 동아시아 경제위기 그리고 사회정책과 관련된 최근 십수 년 간의 일련의 사건들, 예컨대 199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의료보험 통합,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극심한 경제 양극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국민연금제도의 보편적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 등은 소위 말하는 잔여적 복지국가에서 제도적 복지국가로의 전환이 우리사회에서도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정책 영역에서도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인식과 태도가 실제 정책에서의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최고정책결정집단에 의해 폐쇄적이고 획일적으로 논의되어 오던 '복지'에 대한 전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켰으며 그로 인해 사회운동단체를 포함한 복지전문가 세력들의 논쟁에의 참여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의 사례들은 한국사회에서도 이제 국민들의 복지의식이 복지국가의 전개경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연구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먼저 종속변수의 측정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복지의식을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개인의 복지의식이란 실천의지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며 이 부분은 2차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측정의 내용타당도를 어느 정도 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둘째,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사회적 신뢰감이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나 실제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신뢰의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이 연구는 특정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의식의 구조가 복지정책, 더 나아가 복지국가 발전의 특정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한 사회의 복지정책구조는 제도를 둘러싼 정치적 균열과 연대의 형태를 결정하며 더 나아가 복지제도에 대한 특정 집단의 정치적 태도를 규정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복지정책의 유형이나 대상별로 어떠한 집단 간 갈등과 연대가 존재하며 이러한 갈등과 연대가 각각 집단의 복지의식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피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며 이는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참고문헌

- 김연명. 2002.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I》. 서울: 인간과복지.
- 김영란. 1995. “한국인의 복지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모. 1986. 《한국사회복지의 체문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 김영모. 1991. “한국인의 복지인식 재론.” 《사회정책연구》 13: 5-17.
- 김지경. 2006. “신뢰와 사회적 가치지향이 사회적 딜레마 상황에서 협동행동에 주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0(3): 31-44.
- 김희자. 1999. “한국인의 복지태도 분화.” 《사회복지정책》 8: 106-124.
- 류진석. 2004. “복지태도의 미시적 결정구조와 특성.” 《한국사회복지학》 56(4): 79-101.
- 박찬웅. 2006. 《시장과 사회적 자본》. 그린출판사.
- 백정미·주은선·김은지. “복지인식 구조의 국가간 비교: 사민주의, 자유주의, 보수주의 복지국가와 한국.” 《사회복지연구》 37 319-344.
- 안상훈. 2000. “복지정책의 메커니즘과 비계급적 균열구조.” 《사회복지연구》 16:87-115.
- 안치민. 1995.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과 계급.” 《고려사회학논집》 9: 211-228.
- 우아영. 2000. “복지의식에 관한 사회계층간 비교연구.” 카톨릭대학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 유범상·이현숙. 2008. “영국의 복지유형의 의식의 괴리: 그 기원과 시사점.” 《사회복지연구》 38: 325-352.
- 이성균. 2002. “한국사회 복지인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6(2): 205-228.
- 이인재. 1998. “IMF관리체제이후 한국인의 사회복지의식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2: 85-111.
- 조돈문. 2001. “복지의식의 계급효과와 공사부문 효과.” 《산업노동연구》 7(1): 157-191.
- 주은선·백정미. 2008.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 《사회복지연구》 34(가을호): 203-225.
- 최근·류진석. 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 16: 223-254.
- Esping-Anderson, G. 1985. *Politics against Market: The Social Democratic Road to Pow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 Esping-Anderso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The Free Press.
- Fukuyama, F. 1997. *Social Capital and the Modern Capitalist Economy: Creating a High Trust Workplace*. Stern Business.
- Hansenfeld, Y. and J. A. Rafferty. 1989. “The Determinants of Public Attitudes toward the Welfare State.” *Social Forces* 67(4): 1027-1048.

- Handin, G. 1968. "The Tragedy of Commons." *Science* 162: 1243 –1248.
- Immergut, E. M. 1998. "The Theoretical Core of New Institutionalism." *Politics & Society* 26(1): 5–34.
- Mayer, R. C., Davis, J. H., and Schoorman, F. D.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 709–734.
- Mishra, R. 1984. *The Welfare State in Crisis: Social Thoughts and Social Changes*. Harvester Press.
- Olson, M.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ampel, F. C. and J. B. Williamson. 1989. *Age, Class, Politics and the Welfare State*. Cambridge Press.
- Putnam,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apport, A., and Chammah, A. M. 1965. *Prisoner's Dilemma: A Study in Conflict and Cooperation*. Ann Arbor, MI: Univ of Michigan Press.
- Svallfors, S. 2004. "Class, Attitudes, and the Welfare State: Sweden in Comparative Perspective."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8: 119–138.
- Sweeny, J. W. 1973.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the Free-Rider Problem." *Social Science Research* 2: 277–292.
- Taylor–Gooby, P. 1985. *Public Opinion, Ideology and Social Welfar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Therbon, G. 1987. "Welfare State and Capitalist Market." *Acta Sociologica* 30: 237–254.
- Zucker, L. G. 1986. "Production of Trust: Institutional Sources of Economic Structure, 1840–1920."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8: 53–111.
- Wilensky, H. and Lebeaux, C. 1965. *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 Free Press.

[접수 2009/7/22, 1차수정 2010/2/11, 2차수정 2010/3/10, 게재확정 2010/3/11]